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의 특징

이현정 (충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

주거권과 주거복지

주거권(housing rights)

- 인간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
-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는 주거와 주거환경에 거주할 권리”
-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

주거복지

■ 광의의 개념

-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주거수준을 향상시켜 복지를 증진하는 것

■ 협의의 개념

- 시장에서는 주택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주거 여건을 개선하는 것

■ 주거복지의 핵심

- 개별가구의 기본적인 주거욕구를 충족시켜 준다는 기능적인 속성

주택정책의 변화와 주거복지



(출처: 한국주거학회(2007). 주거복지론, p.80의 그림 4-1 일부 수정)

주택정책의 변화와 주거복지

■ 주거기본법(2015 제정)

- 주택정책의 기초가 과거 물리적 거처인 '주택'의 공급에서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주거복지'로 전환되었음을 선언적으로 규정한 대대적인 주택 관련 법제의 변화
 - 「주택건설촉진법」(1972) → 「주택법」(2003) → 「주거기본법」(2015)
 - '주거권'과 '주거복지'를 직접적으로 언급
-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구축과 이를 위한 지원, 주거복지센터, 주거복지 정보체계, 주거복지 전문인력(주거복지사)의 양성과 배치 등 주거복지 서비스의 전달과 관련한 사항과 이를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최초로 법제화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

도시재생뉴딜의 사업의 4대 목표

■ 사회통합

- 도시재생뉴딜을 통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역량강화와 공동체 공간 조성. 활용 사업 시행

■ 주거복지 실현

-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다양한 주체(공공, 민간, 공공+민간)가 주도하는 주거재생사업 시행

■ 일자리 창출

- 주거기능 외에도 상업, 산업,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도시재생뉴딜 지역에 유치하여, 양질의 소득기반 조성

■ 도시경쟁력 회복

-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 활용하고, 안전한 도시공간을 조성하여, 환경·안전 측면의 회복탄력성(Resilience) 강화

도시재생 뉴딜의 차별화 요소

기존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 뉴딜 사업
중앙주도 방식 (Top-down)	→	지역주도 방식 (Bottom-up)
주민체감이 미흡한 대규모 계획 중심 대규모 철거 또는 정비 형태의 도시개발 방식	→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 중심 마을 도서관, 주차장, 주민생활편의시설 (커뮤니티 공간, 무인택배함 등) 등 생활밀착형 편의시설 설치
전국 46곳의 미흡한 지원 (연평균 국비 1,500억원 지원)	→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영향이 적은 소규모 주거재생사업 위주로 전폭적 · 통합 지원 (연평균 재정 2조원, 기금 4.9조원, 공기업 투자유도 3조원으로 지원 확대)
사회적 약자 배려 부족	→	주민 재정착, 부동산 시장 안정 최우선

도시재생 뉴딜의 차별화 요소

- **기존 사업** – 뉴타운 등 기존의 도시정비 사업은 대규모 철거 또는 정비 형태의 도시개발 방식으로 추진
 - 대규모 계획 수립 중심, 중앙정부가 주도
 - 지원이 부족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미약 (읍·면·동 기준 국내 도시의 2/3(2,200여개)가 쇠퇴 중이나 정부지원은 전국적으로 46곳에 불과(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재정 지원은 연 3,000억원 수준)
- **도시재생 뉴딜** – 대규모 철거·정비없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설 설치 등 주민과 지자체가 주도
 - 사업물량의 약 70%를 광역지자체가 선정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 정부는 재정보조,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공기업 투자유도 등을 기반으로 예산 적극 지원 계획
 - 지역 내 임차인, 영세상인, 소상공인 등의 주거 및 경제 활동 공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동지내몰림 방지 대책 마련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

공기업 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

집주인 임대주택 블록방식

안전우려 건축물(D, E등급) 재건축 사업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

공공지원
소규모
정비사업

민간 자율
주거재생
사업

- 자율주택 정비사업
- 가로주택 정비사업
- 소규모 재건축 사업
- 집주인 임대주택사업
- 단독·다가구주택 리모델링 (그린리모델링 사업)

임대주택
공급

공공 리모델링 임대

기존주택 매입임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리츠

기능복합형 공공임대주택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창업지원주택)

생활
인프라
개선

- 소방도로 개설·확충·정비
- 공공·민간주도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
- 국·공유재산 활용 복합주차장 건설
- 공원·녹지, 어린이놀이터
- 공공화장실, 무인택배함
- 쓰레기 분리수거장(재활용+음식물)
- 생활악취 방지, 골목길 정비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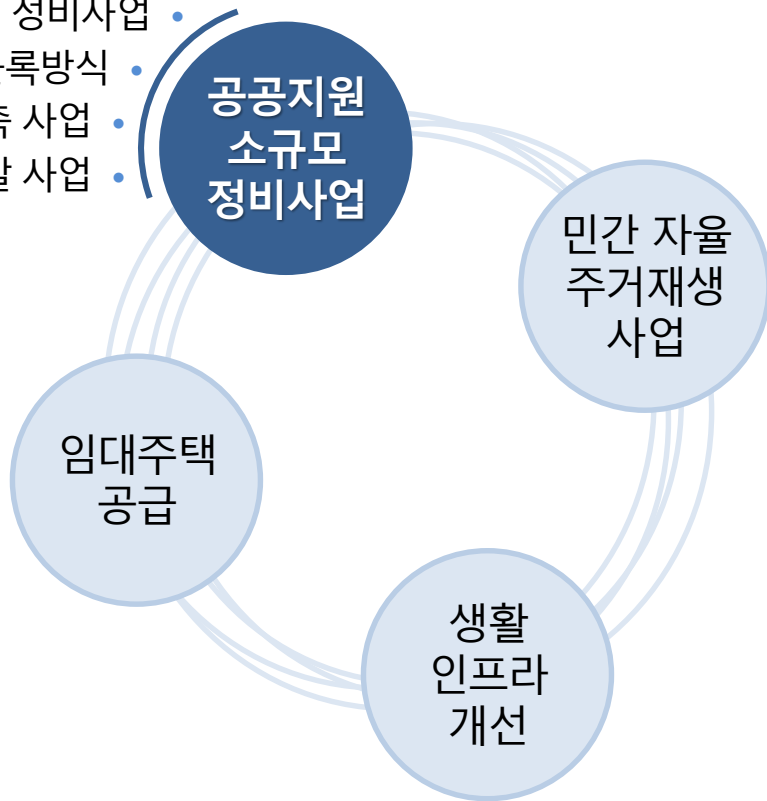
■ 공공지원 소규모 정비사업, 민간 자율 주거재생 사업

- 신축건물 저층부에 어린이집, 마을도서관 등 공동이용시설을 건설하거나 지하공간을 활용한 공용주차장 건설하면, 해당 부분에 대한 건설비용을 도시재생뉴딜사업비에서 지원
 - 지자체는 사업시행자에게 마을주차장 등 공동이용시설 건설을 위한 비용(건설비+토지비)을 지원하고, 해당 시설을 기부채납 받아 마을주차장 등으로 활용
- 용적률 완화 등 각종 건축특례

■ 임대주택 공급 사업 시

- 대학생, 창업희망자 등 청년가구나 신혼부부 대상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 유형 적용

- 공기업 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
- 집주인 임대주택 블록방식
- 안전우려 건축물(D, E등급) 재건축 사업
-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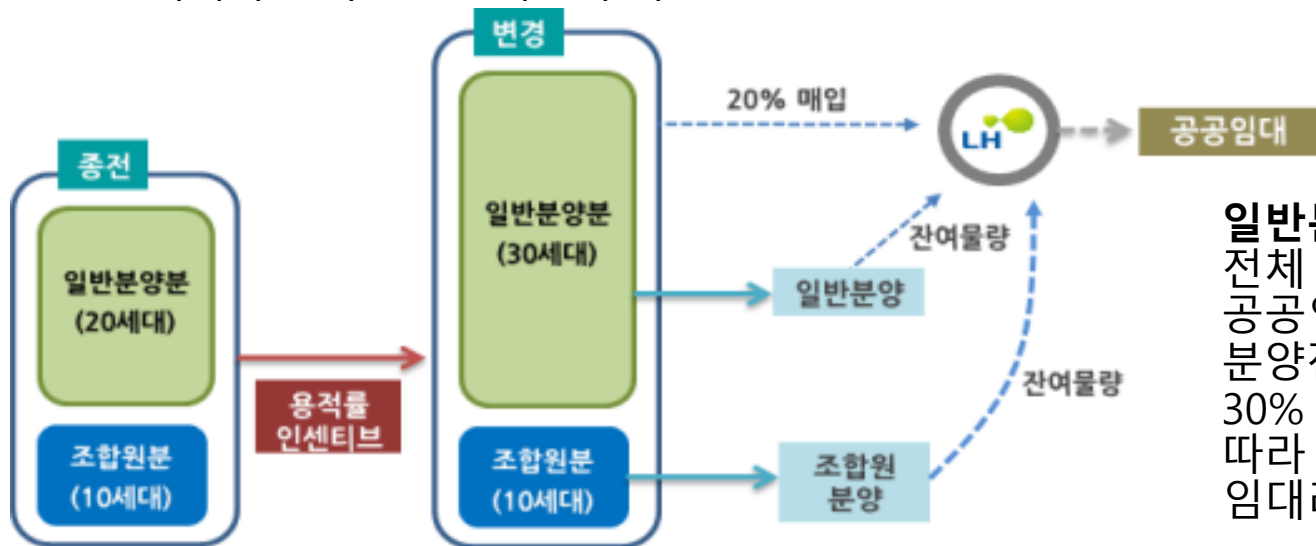


공기업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 **개념** – 조합 · 공기업이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동시행자가 되어 사업추진
 - 지자체의 용적률 완화 + 정부, 공기업의 일반분양 매입지원 → 조합원 분담금을 최소화 하고, 일반분양 매입분은 공공임대로 공급
 - 전체세대수 150세대 미만은 공기업 자체 재원으로 매입하고, 150세대 이상은 청년, 신혼부부 매입 임대리츠(주택도시기금 출자)가 매입
 - 건축물에 마을도서관 등 지역주민 공동이용시설도 함께 설치 · 운영
- ❖ **리츠(REITs)**: 부동산투자신탁을 의미하는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의 약자로, 우리나라 주택정책에 있어서 임대주택 리츠란 주변 시세보다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추진 중인 부동산투자회사를 뜻함.

공기업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 **사업구조** - 조합과 공기업이 분담금 수준, 공공임대주택 및 공동이용시설 공급 관련 사항을 합의하면 지자체는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18.2.9.시행)에 근거하여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거나 공동이용시설을 공급하면 법적 용적률 상한범위 내에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일반분양분 매입지원
전체 호수의 20%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 분양잔여분을 일반분양분의 30% 범위에서 매입요건에 따라 청년·신혼부부 매입 임대리츠 또는 공기업 매입

공기업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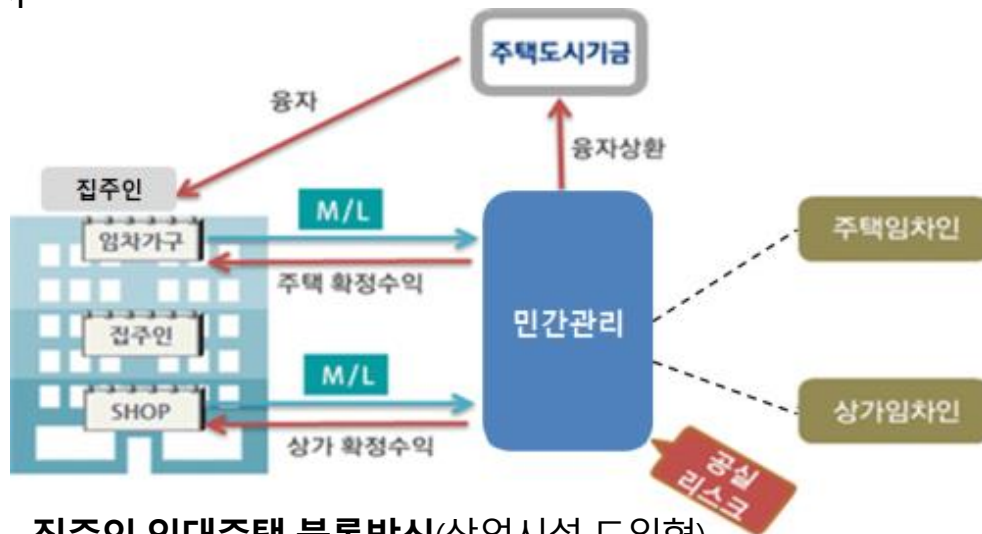
- **지원사항** – 정부, 지자체, 공기업이 행정·재정적 지원 실시
 - 지자체 –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설립, 건축심의, 사업시행계획 등에 대한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하여 사업 효율성 제고
 - 특히,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8조, 제49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및 공동이용시설 공급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건축특례 등 적용
- **기금융자** – 사업시행인가 시 주택도시기금에서 총사업비의 50% 범위 내 금리 1.5% 수준의 저리 융자
- **재정지원** – 신축건물 저층부에 어린이집, 마을도서관 등 공동이용시설을 건설하거나, 지하공간을 활용한 공용주차장을 건설하면, 해당 부분에 대한 건설비용을 도시재생뉴딜사업비에서 지원
 - 지자체는 사업시행자에게 마을주차장 등 공동이용시설 건설을 위한 비용(건설비+토지비)을 지원하고, 해당 시설을 기부채납 받아 마을주차장 등으로 활용

집주인 임대주택 블록방식

- **개념** –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의 단독·다가구를 정비하고, 저층부는 공동이용 시설(or 근생시설)로, 상층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
- **사업방식** – 정부는 집주인에게 건축비 저리용자(연1.5%)를, 지자체는 저층부 관리·운영권을 받는 조건으로 건축비 보조
 - 건축비 보조를 받지 않는 경우 민간임대관리업체에게 임대관리 위탁
 - 민간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집주인에게 임대주택의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시세 90% 수준으로 재임대

집주인 임대주택 블록방식

- **사업구조** – 지자체는 노후주택이 밀집한 블록의 주택 개량수요를 조사하고, '집주인 임대주택 지원구역'으로 선정하여 사업추진
 - 근거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18.2.9.시행)
 - 집주인들은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지자체는 자율주택정비사업 절차에 따라 통합심의, 용적률 인센티브 등 행정지원 실시
 - 저층부에는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고 건설 후 지자체가 마을도서관, 평생교육관 등으로 운영
 - 상업시설을 넣는 경우에는 민간주택임대관리업체에게 임대관리를 위임하여 주거공간과 상업공간을 유기적으로 운영



집주인 임대주택 블록방식(상업시설 도입형)

집주인 임대주택 블록방식

- 블록 안의 주택 전체가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는 집주인은 배제 가능
 - 다만, 대부분의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은 부정형의 필지가 다수인 만큼, 전원참여 조건 하에 필지정리 후 착공하는 것이 효과적



▶ 집주인 임대주택 블록방식
사업 필지정리 전후 예시

집주인 임대주택 블록방식

- **지원사항** – 정부, 지자체가 행정·재정적 지원 실시
- **민간역할** – 주택부분에 대해서만 임대관리하거나 주택과 상가부분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임대관리 실시
 - 설계는 민간과 지자체가 협의한 컨셉이 적용될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 수립 방식으로 진행하고, 시공사는 공개경쟁입찰로 선정
- **지자체 역할** – 공사기간 집주인들에 대한 이주 지원, 주차장 규제 일부 완화, 신속한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지구단위계획 등 행정계획 변경 포함) 실시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며, 이 경우 용적률 완화 및 건축특례 적용 가능

집주인 임대주택 블록방식

- **기금융자** – 사업인가 시 주택도시기금에서 총사업비의 일부를 지원
- **재정지원** – 신축건물 저층부에 어린이집, 마을도서관 등 공동이용시설을 건설하거나, 지하공간을 활용한 공용주차장을 건설하면, 해당 부분에 대한 건설비용을 도시재생뉴딜사업비에서 지원
 - 지자체는 사업시행자에게 마을주차장 등 공동이용시설 건설을 위한 비용(건설비+토지비)을 지원하고, 해당 시설을 기부채납 받아 마을주차장 등으로 활용

안전우려 건축물(D, E등급) 재건축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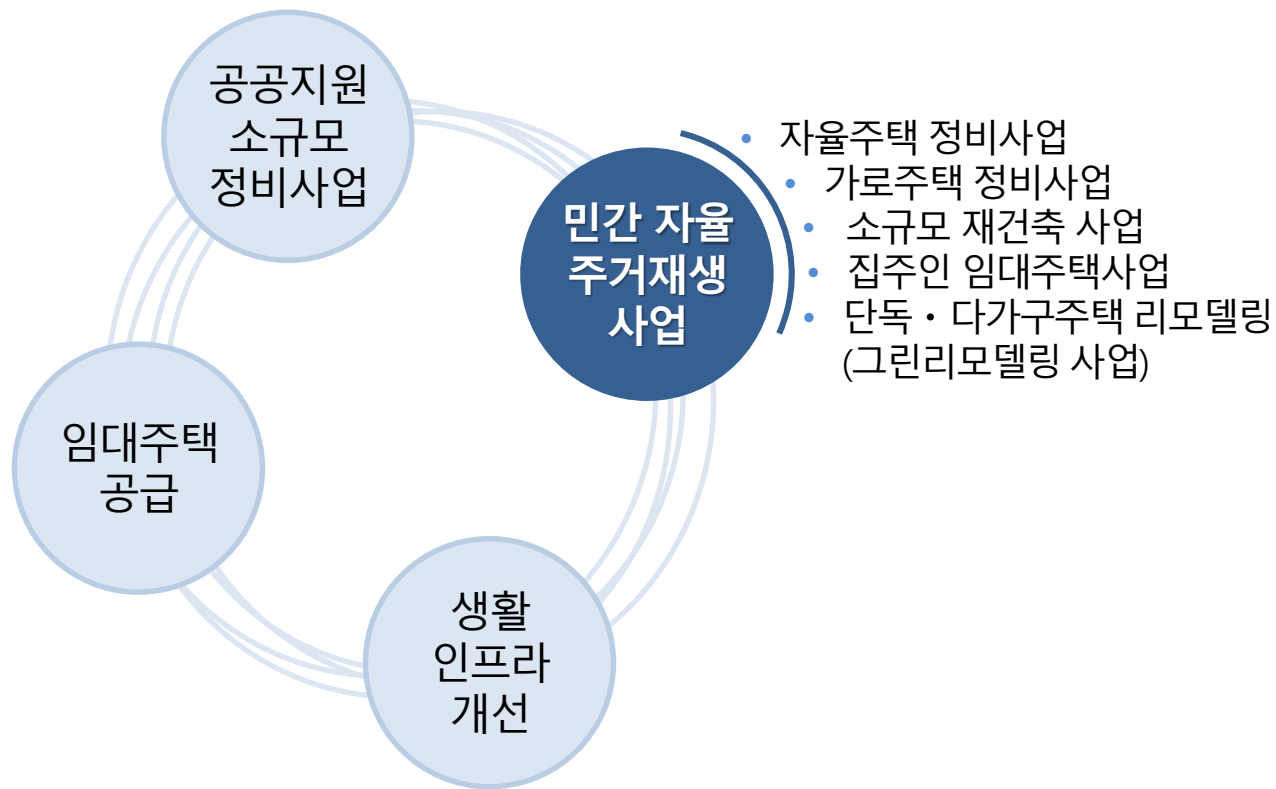
- **개념** – 재난안전등급 D·E등급 건축물 중 사업추진이 어려워 공공의 개입이 불가피한 지구를 대상으로 정비 추진
- **사업구조** – 시장·군수 등은 안전등급 D, E 공동주택 등에 대해 공공주택지구 또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 후 직접 또는 공공기관 주도로 사업을 추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용적률·건축규제 완화, 국고보조금 지원 등) 제공
- **사업방식** – 대상지 내 원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先시행한 후 원주민용 주택, 공공임대주택 및 주민 생활편의시설 등 건설
 - 인근 분양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순환이주주택 등 활용
- **재생연계성** –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도심 노후 주거지 내 재난위험시설 재생을 통한 주거환경개선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핵심 사업으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지역 내 거점공간으로 활용

안전우려 건축물(D, E등급) 재건축 사업

- **이주비 용자지원** – 재난안전법상 안전위험 D, E 등급에 거주하는 세대이주를 촉진할 수 있도록 이주자금(전세자금) 저리 용자지원 추진
- **재정지원** – 신축건물 저층부에 어린이집, 마을도서관 등 공동이용시설을 건설하거나, 지하공간을 활용한 공용주차장을 건설하면, 해당 부분에 대한 건설비용을 도시재생뉴딜사업비에서 지원
- **임대주택 사업비 지원** – 공공임대주택 유형 및 규모에 따라 기 시행중인 주택도시기금 저리용자 시행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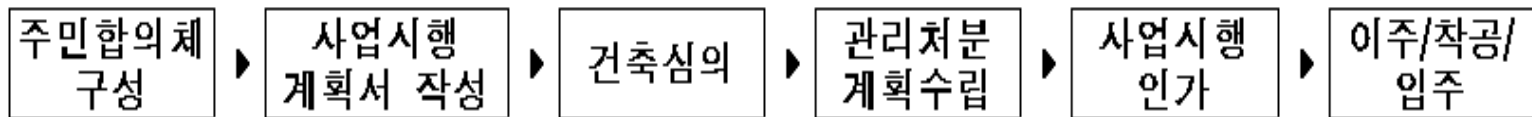
- **개념** – 도심 내 노후공공청사 등을 공공시설, 수익시설 및 임대주택으로 복합개발하여 공유재산 가치증대 및 공공복지서비스 제고
- **사업구조** – 사업시행자(공공기관)가 공공청사 부지에 복합건축물을 신축한 후 공공청사 등은 지자체에 귀속, 판매 등 수익시설과 청년주택은 사용허가 기간 (30~50년)동안 공공기관에서 운영·관리
 - 프로그램: 공공시설 내 공동작업장 조성운영 지원, 공유주거지원 프로그램, 커뮤니티 시설 관리 사업, 주민 동아리방 활동프로그램 등 적용
- **지원사항**
 - 건축기준 등 특례 적용
 - 기금 및 재정지원 – 신축건물 내 공동이용시설 등의 공사비는 뉴딜사업비로 지원, 기타 사업비는 공공기관에서 先 투입 후 수익·편익시설 등으로 보전, 공공임대주택 건설비는 공공주택 유형에 따른 예산지원 기준에 의거 주택도시기금 출자 또는 용자로 지원



자율주택 정비사업

- **개념** – 단독·다가구 주택 또는 20세대 미만 다세대 주택의 집주인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

- **사업구조** – 사업시행인가만 받으면 착공할 수 있는 간이한 구조



- 건축 연면적의 20% 이상을 준공공 또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하면 용적률을 법적상한까지 완화 가능
- **기금융자** – 사업인가 시 주택도시기금에서 총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저리 융자 지원

가로주택 정비사업

- **개념** – 노후·불량건축물(조례가 정하는 준공·사용승인 이후 20년 이상 경과한 주택)이 밀집한 1만㎡ 이내 가로구역에서 종전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
 - 도시계획도로에 둘러싸여 있는 일단의 구역이어야 하며, 구역 내 노후주택이 2/3이상이고, 집주인의 80%이상인 사업에 찬성 필요
- **기금용자** – 사업인가 시 주택도시기금에서 총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저리용자 지원
- **재정지원** – 신축건물 저층부에 공동이용시설을 건설하거나 지하공간을 활용한 공용주차장을 건설하면, 해당 부분에 대한 건설비용 지원
 - + 해당 지역 용적률에 지자체에서 정한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추가 적용

소규모 재건축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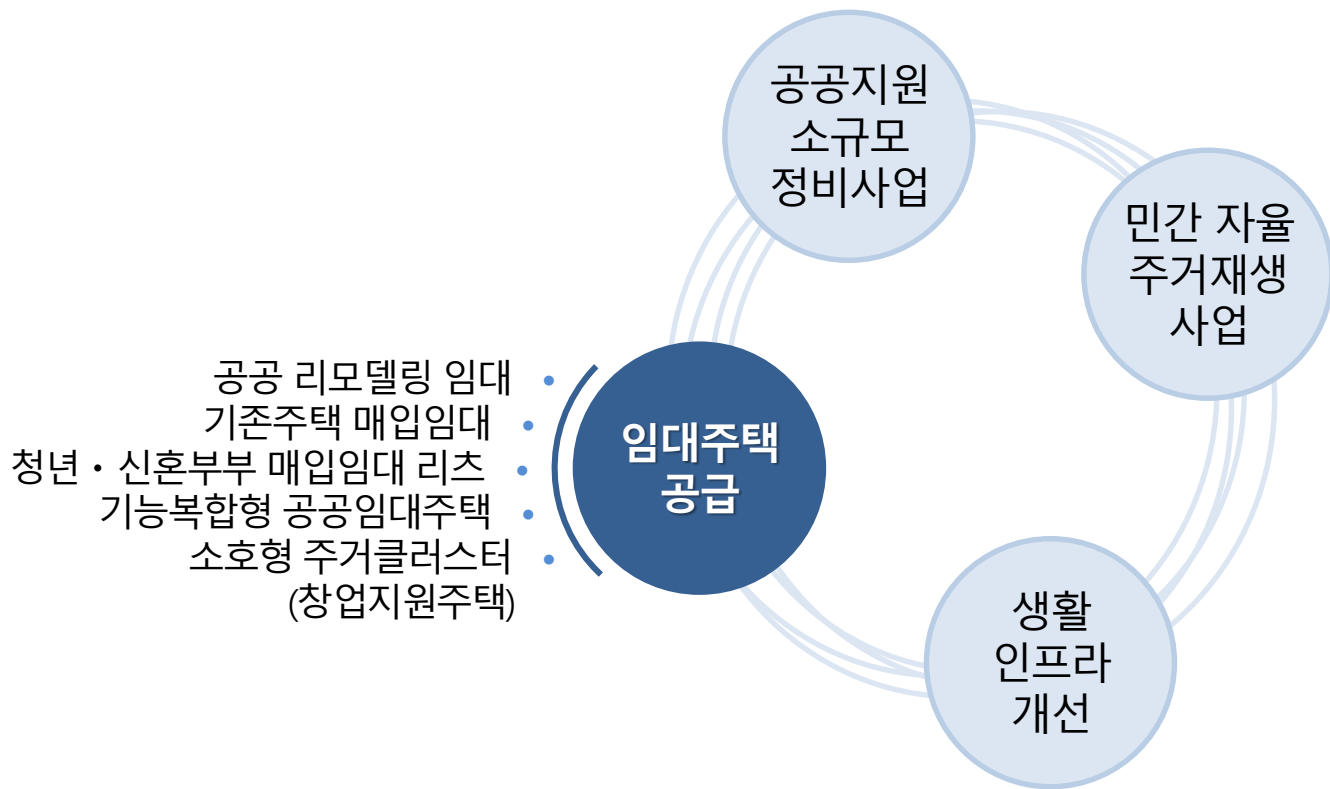
- **개념** –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고 지역의 면적이 1만㎡미만의 지역에서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중 노후·불량건축물의 세대수가 200세대미만인 경우,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
- **사업구조** – 집주인들이 설립한 조합이 직접 시행하거나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공기업, 건설업자(신탁업자)등과 공동시행
 - 노후불량건축물 조건에 해당하면 별도 안전진단 없이 사업진행
- **기금융자** –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주택유형별 건설자금 일부 지원
- **재정지원** – 신축건물 저층부에 공동이용시설을 건설하거나 지하공간을 활용한 공용주차장을 건설하면, 해당 부분에 대한 건설비용 지원
 - + 해당 지역 용적률에 지자체에서 정한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추가 적용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건축·개량방식)

- **개념** – 집주인이 기존주택의 리모델링 또는 신축을 통해 1~2인 주거용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저리의 기금융자와 공기업의 임대관리 지원
- **사업구조** – 집주인에게 저리의 건설자금을 융자해주는 대신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받도록 하되, 공기업이 임대관리 실시
 - 집주인은 시세의 50~80% 수준으로 대학생 및 독거노인에게 임대하면서, 임대기간(8~20년 선택) 동안 월세수입으로 융자금 상환
- **기금융자** – 사업인가 시 주택도시기금에서 총사업비의 일부를 지원

단독 · 다가구주택 리모델링 (그린리모델링 사업)

- **개념** – 노후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냉·난방 등 에너지 절감률 향상시, 건축주가 초기 사업비에 대한 부담 없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사비 금융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
 - 469만동에 이르는 15년 이상 경과된 기존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기여
- **사업구조** – 건축주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통해 LH 공사에 그린리모델링 사업 신청하면 에너지 성능개선비율에 따라 금융이자 등 지원
 - 단열 보완, 기밀성 강화, 외부창호 성능개선, 일사조절장치 등 필수항목 중 한가지 이상 적용
- **재정지원** – 사업에 소요되는 공사비의 금융이자에 대하여는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선정기준』에 따라 이자차액을 보전



공공 리모델링 임대, 기존주택 매입임대

■ 공공 리모델링 임대

- 공공에서 공실률이 높은 노후 단독·다가구주택, 고시원 등을 선별하여 매입 후 1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하여 공급하는 공공 리모델링 임대사업
- 現 임대주택 공급에 소외되어 있는 고령자, 대학생 등 1~2인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공급
- 대학생, 고령자 등 1인 주거형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 교통 편리성 등 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매입

■ 기존주택 매입임대

- 도심 내 거주 수급자 등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시행자가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
 - 사업대상지역: 수도권 전역 및 인구 8만 이상 시·군 등 전국 90개 지역
- 시중전세가의 30% 적용, 영구임대주택 주거비부담 수준

청년 · 신혼부부 매입임대 리츠, 기능복합형 공공임대주택

■ 청년 · 신혼부부 매입임대 리츠(REI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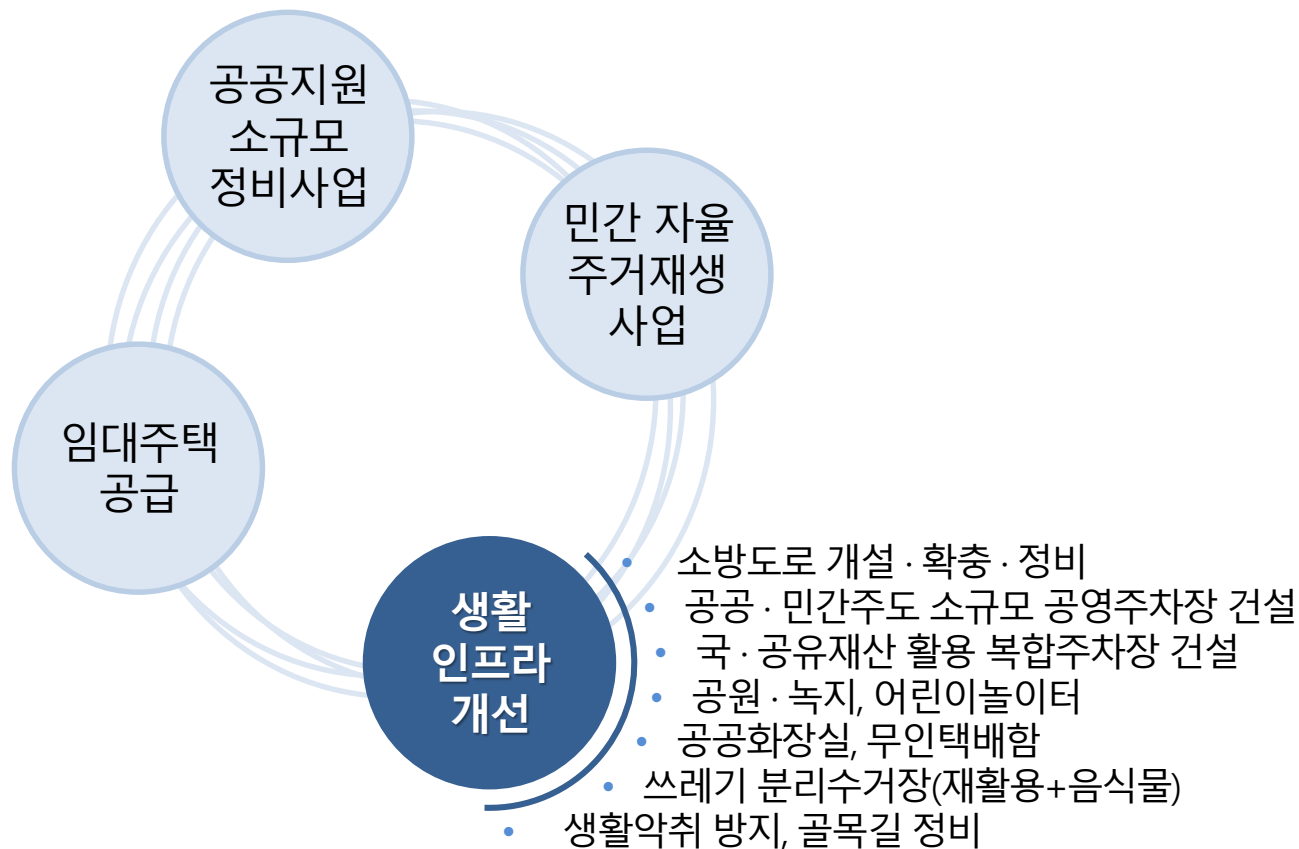
- 신혼부부 및 청년층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리츠(REITs)를 설립, 임차인 보증금과 기금을 통해 기존 아파트를 매입한 후 공기업에 위탁하여 공급하는 즉시 입주 가능한 매입형 공공임대사업 추진
- 임차희망인이 직접 매물을 찾아 공기업에 신청하거나, 공기업이 주택을 매입하여 임차인을 모집하는 방식

■ 기능복합형 공공임대주택

- 청년주택 수요가 많은 도심 내에 청년 등 1인 가구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심 내 낙후된 토지에 소규모 공공임대주택과 지역생활편의시설(주민복지시설, 주차장 등)을 복합개발하여 단기간 내 주거와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기능복합형 공공임대주택 사업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창업지원주택)

- 청년층의 주거와 일자리/창업 등이 결합한 청년층 특화주택으로, 청년 창업인의 주택과 창업·지역특화산업 육성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시설·서비스를 결합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복주택 등 현행 공공임대주택을 활용(복합건설)하여 공급
 - 행복주택 활용 시 주변시세의 60~80% 수준으로 임대료를 적용하여 저렴하게 공급
- ❖ 소호(SOHO): Small Office Home Office의 약자로 자신의 방이나 집 안의 창고 등에서 근무하는 가택 근무의 형태를 뜻함.



생활 인프라 개선

■ 소방도로 개설 · 확충 · 정비

- 노후 취약 주거지, 주거 밀집지역 등 소방차 진입 불가지역에 대해 화재예방 및 이동성 확보를 위한 소방도로 개설

■ 공공주도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

- 주차시설이 부족한 저층주거 밀집지역에서 공영 주차장을 공급하는 사업

■ 민간주도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

- 저층주거 밀집지역 내 민간이 스스로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주차장 조성비용 등을 지원
- **단독주택 여유공간 활용사업**: 차장이 없는 단독주택 보유자들이 자신의 주택부지를 활용(담장 허물어 만들기 등)하여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사업비 지원
- **신축 주차복합시설 매입 사업**: 민간이 지자체 또는 공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민간 소유부지에 지자체 또는 공기업이 원하는 수준의 주차복합시설 신축

생활 인프라 개선

■ 국공유재산 활용 복합주차장 건설

- **공원지하 활용:** 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을 통해 기존 녹지나, 도시공원 등의 상부는 공원으로 하부는 공영주차장으로 활용
- **공공시설 부지 등 활용:** 지평식 공영주차장 및 도시계획시설(공원, 녹지 등)등 공공부지를 활용, 지자체 주도로 복합건축물(공영주차장+주민편의시설 등) 건설을 통해 토지이용의 효율화 및 부족편의시설 확충 도모
- **공공임대주택 활용:** 지자체 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내등 공기업이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단지 내 부설주차장을 추가 확보하여 공영주차장(입주자용 外 부분)으로 활용·운영하는 방식

생활 인프라 개선

■ 공원 · 녹지 (쌈지공원, 미집행 시설 등)

- 도시재생지역의 주거 ·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공원, 녹지 등 시설을 공급하여 주민이 모일 수 있는 장소로 활용
- 국 · 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쌈지공원을 조성하거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부지를 활용하여 공원 · 녹지 조성

■ 어린이 놀이터

- 어린이, 부모, 이웃이 소통하여 함께 만드는 환경 친화적 놀이터 제공

■ 공공화장실

- 전통시장, 관광지 등 유동인구 밀집지역 및 개인 위생시설 취약지역에 공공화장실 제공

생활 인프라 개선

■ 무인택배함

- 단독 및 다세대주택 밀집지역 및 1~2인 거주인구 많은 지역에 무인택배함 설치·운영

■ 쓰레기 분리수거장(재활용+음식물)

- 주거 밀집지역에 쓰레기 및 음식물 분리수거장을 설치하여 도시미관 개선과 폐기물 배출량 감소를 도모

■ 생활악취 방지

- 주거·상업 밀집지역에 하수도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효율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악취저감 사업 방안 제공

■ 골목길 정비

- 주택밀집지역의 좁은 골목길 내 대문, 담장을 철거한 뒤 주차장 및 녹지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주차난 해소, 보행 환경 개선에 기여